

【종합】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중장
陸인사사령관 백군기 중장
정부, 장성급 20명 인사

정부는 21일 박장명(학군 12기) 소장을 중심으로 진급시켜 9군단장에 보임하는 등 장성급 간부 20명에 대한 정기 진급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2명이 중장으로, 12명이 소장으로 각각 진급했으며 중장 6명의 보직이 변경됐다. 이상로(해사 29기) 소장이 중장진급과 동시에 와병 중인 김병균(중장·해사 27기) 사령관의 후임으로 해병대사령관에 보임됐다. 또 황준선(소장·육사 32기) 육군 1사단장이 5월초 임기가 만료하는 정승호(소장·육사 32기) 사단장 후임으로 자이툰부대 사단장을 맡게 됐다. 또 육군본부 조직 개편에 따라 처음 신설된 육군 인사사령관에는 백군기(중장·육사 29기) 육본 감찰실장이 임명됐다. /최권일기자 cki@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 체포... 광주·전남 정가 초긴장

‘공천헌금 2탄 터지나’ 촉각
일부선 “민주당 죽이기” 음모론 제기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이 최광태 전 의원에게서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망연자실해 하며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천과정의 잡음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다 전남지역의 한 국회의원을 겨냥한 또 다른 공천헌금 사건이 2탄으로 터질 수 있다는 소문까지 정가를 휩쓸고 있어 민주당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1일 조 사무총장의 체포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소속의 광주지역 후보 캠프 대부분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사태의 파장 최소화와 이에 따른 선거전략을 논의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한 단체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기본 선거전략이 마무리되는 등 선거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며 “애초부터 중앙당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를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더욱더 중앙당과 거리를 두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이 악재로 선거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할 형편”이라며 “중앙당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여론의 음모설을 제기했다. 또 다른 후보의 선거 관계자는 “조 총장의 체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점 등을 보면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여론의 음모와 공격이 어떻게 계속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관계자도 “여러

‘北 대표단 5·18묘지 참배’ 제의

남측위 ‘6·15대축전’ 광주 개최 등 초안 공개
남북, 27일 개성서 6·15 행사 최종 논의키로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남측 대표단이 북측 인사들을 포함한 행사 관계자들의 5·18 국립묘지 참배를 공식 제의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가 21일 공개한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기본계획(초안)’에 따르면 남북, 해외측 주요인사 약 40명에 달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일정이 짜여 있다. 망월동 참배단에는 민간 대표는 물론 정부 당국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남측위는 설명했다. 북측은 지난해 8월 14일 8·15 민족대축전 참가차 서울을 방문한 김기남 노동당 총

리 추하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4일째인 17일에는 노동, 농민, 여성, 청년 학생, 언론 등 부문별로 상봉모임을 갖고 이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합동예술공연 및 폐막식을 거행한 뒤 북측 대표단은 18일 전세기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남북은 오는 27일 개성 자남산연관에서 올들어 3번째 실무접촉을 갖고 6.15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 개최방안 등을 논의한다. 남측위원회는 21일 “실무진에서 논의가 진행된 6·15 기념행사 개최문제를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지를 방침”이라며 “광주 개최 방안”에 대해 북측도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백낙남 남측위 상임대표와 안경호 북측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등 수석대표들의 직급이 높아지게 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시설
새만금 1억2천만평, 미래성장 거점으로

지난 1991년 착공된 새만금 방조제 연결공사가 15년의 대역사(大役事)끝에 어제 완공됐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위용을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2천만평의 광활한 새 국토가 조성되게 됐다. 간척지 바닷물을 빼고 염분 제거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1년 개 부러 새로운 토지와 담수호 활용이 가능해 된 것이다. 새만금 공사는 솔한 논쟁과 공사 중단이라는 시행착오를 극복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각별하다. 좁은 우리 국토를 확장했다는 자부심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공사 지연과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은 실로 막대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환경단체의 노력은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새만금 미래는 이제부터다.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농림부는 당초 목축대로 농지 조성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최단거리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 관광단지나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동북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실득력을 얻고 있다. 규모와 효율을 고려할 경우 농업과 산업, 레저 등 복합용도 공간으로 활용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6월 국토연구원 의 용역보고서가 발표되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을 놓고 국민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 활용하던 간에 환경단체들의 우려처럼 제 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으로 개발과 환경친화를 함께 이루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가 미래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전공노 특정정당 지지 부적절한 선택이다

전공무원노조(전공노)가 5·31 지방선거에서 자체후보를 내고 민주당 후보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재작년 총선때도 민주당 지원활동을 벌이다 정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선거 때마다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에 휘둘리면 공정한 대국민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지난해 2004년 전교조가 진보적 개혁정치를 지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참여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6월 공무원 선거운동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지지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의 참뜻과 배치된다. 전공노측은 “사상·양심적으로는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실정 관점에서 지지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의 공개적 선거운동은 법을 어기는 부적절한 선택이다. 공무원이라도 개인적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다. 선거가 끝난 뒤에 공직사회 기강이 흐트러지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흑역사도 법을 어겨 처벌을 받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中 북부 ‘온난화·사막화’ 가속도

울퉁이 중국에서 황사가 유난히 잦다. 또 그 영향이 한국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중국 국가입업국 황사방지관리공실 류 웨이 주임은 지난 20일 국내외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고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첫번째 원인으로 중국 북부지방의 기온 상승을 꼽았다. 온난화로 인해



韓총리-헌법재판소장 한담
한명숙 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예방, 환담하고 있다. /연협뉴스

기아차 ‘뉴카렌스 라인’ 가동 잠정 중단

인력배치 노·사 이견...생산 차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차인 뉴카렌스(UN)의 생산라인 가동이 노조측의 조립라인 인원 배치문제로 잠정 중단됐다. 21일 기아차광주공장에 따르면 당초 예정보다 38일 늦은 지난 8일 가동을 시작한 신차 뉴카렌스 생산라인이 10일부터 다시 가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회사측은 “노·사가 생산라인에 투입키로 합의한 910명의 인원을 차체·도장·의장부

등 라인공정별 배치에 시간이 걸려 잠정 중단한 것으로 비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며 “내주 초반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조합원 일부가 지난 18일 회사 분관 인사실장실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라인 각부서 인원을 배치했다”며 인사실장실 출입문 등을 부숴 회사측이 이를 조장부 13명을 폭력혐의 등으로 고소해 자칫 이 사건이 가동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종태기자 jtlee@

‘아버지 출산휴가제’ 2008년 도입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 육아휴직 급여도 내년부터 인상
육아 휴직급여는 올해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교육대학·사범대학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제7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3일간의 ‘배우자출산 휴가’를 법제화해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사용이 불가능하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일부 교육대학에서 실시중인 장애인특례입학이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대학으로는 제주·충청·경인·고대 등 3개교만, 사범대학은 13개교만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다. /연협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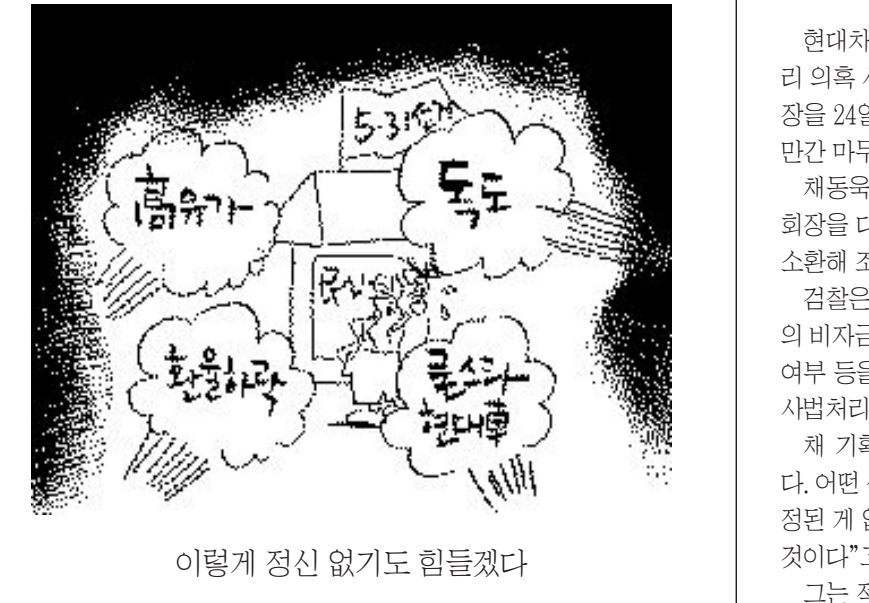
한나라 경기지사 후보 김문수씨 새 새해군인회장 박세직씨



한나라당은 21일 경기지사 후보선출대회를 열어 김문수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2천153명 중 1천237명(57.4%)의 지지를 얻어 김영선(571표), 전제희 의원(340표)을 큰 표차로 따돌렸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 경기지사 본선은 열린우리당 진대재후보와 김문수 후보간 ‘숙명의 일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광주일보)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including circulation, advertising, and general inquiries, along with subscription rates.

빛다만평 - 김중두



이렇게 정신 없기도 힘들겠다

정몽구 회장 24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 ‘필요시 정의선 사장도 재소환’ 검토
현대차 그룹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승계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해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 회장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나 글로벌비스 등을 통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승계, 부채 탕감 로비 여부 등을 정 회장이 지시했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게 없지만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적합한 결론이 ‘엄정한 잭대’를 뜻하는지에

대해 “그것도 포함된다”고 밝혀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논리보다는 법적 기준에 무게를 두고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전날 소환돼 18시간 가장 조사받고 이날 새벽에 귀가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나 정 회장 가운데 최소 한 명은 구속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회장이 정·관계를 상대로 한 금융 로비 등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하거나 임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아들인 정 사장을 다시 불러 재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과정에 개입해 금융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